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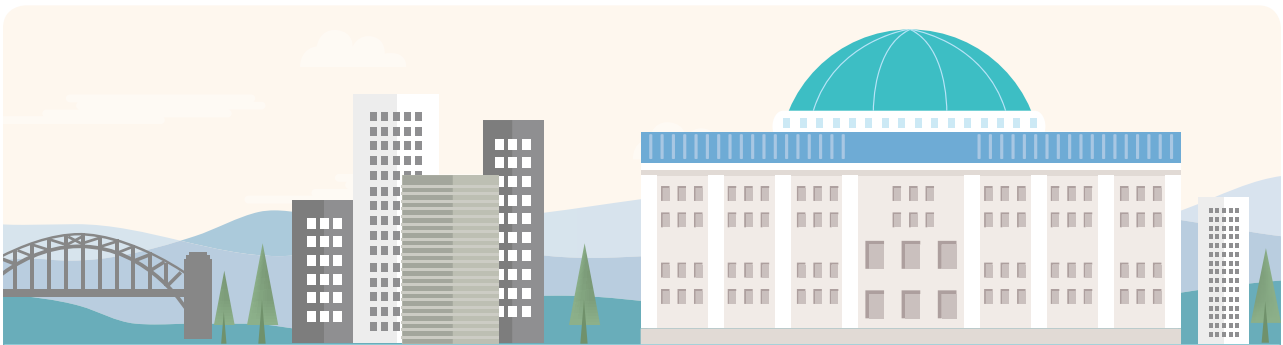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여성 당직자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정당 내·외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7 / E-mail: kekkekek@kwidimail.re.kr)

성평등 정책 외면한 정당의 조직문화와 여성 당직자 지위 개선 방안

초록

- 여성 당직자 5명 중 2명은 정당 내 부서배치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당들은 여성정책 업무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하는 등 정당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당직자의 정치세력화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정당 내 핵심 네트워크에서의 소외를 경험하는 등 스스로도 성평등한 정당 조직문화 조성에 소극적이었음.
- 위 내용을 토대로 여성 당직자 지위와 역할 강화 방안을 위해 ① 정당 사무처 고위 당직 여성할당제 채택 및 여성 실·국장 40% 이상 보장, ② 여성정책 업무의 주변화 개선, ③ 네트워크의 여성 당직자 참여 확대정책 제고 등을 제언함.



여성 당직자의 지위와 역할 강화 방안

- 정당 사무처 고위 당직 여성할당제 채택 및 여성 실·국장 40% 이상 보장
- 여성정책 업무의 주변화 개선
- 네트워크의 여성 당직자 참여 확대정책 제고

1. 배경 및 문제점

- 정당 사무처가 본격적인 정치총원의 경로는 아니지만, 사무처 당직자는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업무이다 보니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치참여로 경력이 개발되기도 하는 상황임. 이러한 점에서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정당이라는 조직은 직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참여의 통로라는 특수한 직장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사무처에 근무하는 남녀 당직자에 대해 정당의 인사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무처를 둘러싼 정당 조직문화 속에서 남녀 당직자의 직무 경험, 네트워크의 경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당의 조직문화와 조직의 작동원리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조사개요>

조사대상	5개 정당 사무처 당직자 남녀 총 200명(남성 110명, 여성 90명)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9.7.22.~2019.9.6.

- 여성 당직자 5명 중 2명은 정당 내 부서배치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당들은 여성정책 업무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하는 등 정당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 정당 당직자의 부서배치는 대부분 순환보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배치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0.0%, 남성이 24.5%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15.5%p 높게 나타남.

<표 1> 정당 당직자의 부서배치 차별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χ^2
부서배치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200)	31.5	68.5	5.479**
여성	(90)	40.0	60.0	
남성	(110)	24.5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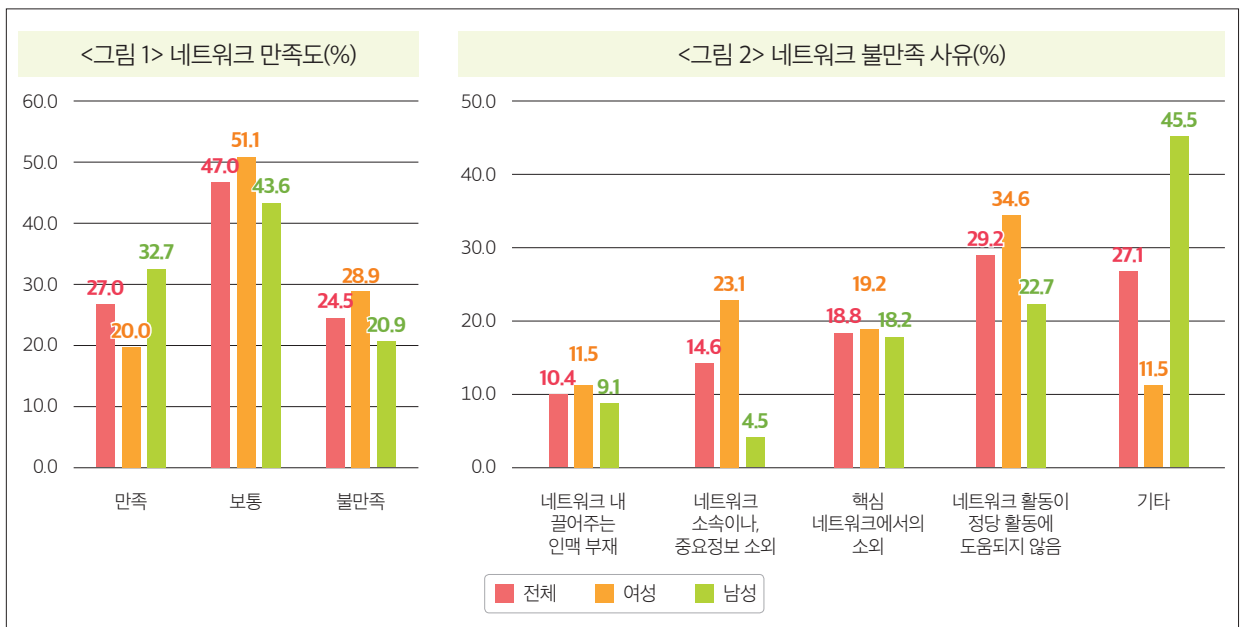
주: ** p<0.01

- ▶ 각 정당별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인 여성국 혹은 관련 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100% 여성으로 구성되고, 모든 정당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는 단지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성별분업이 고착화되어있어 정당운영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견인할 수 있는 여성정책 업무의 위상이 낮음을 확인함.
- ▶ 정당은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당원 및 핵심간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를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당원·당직자 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음.
- ▶ 정당의 여성 정치참여 교육은 주로 예비 여성 후보자를 위한 '아카데미' 형식이 많았으며 사무처 당직자에 맞춘 직무교육이나 젠더감수성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었음.



여성 당직자들은 남성 중심 정당문화에서 정치참여의 기회 요인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도 성평등한 정당 조직문화 조성에 소극적이었음.

- ▶ 정당 당직자들은 정당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 달리 정치참여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정당 내 네트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당 조직이 남성 중심 조직인 상황에서 여성 당직자들은 당내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 정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기여도를 36.1%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여성 39.8%, 남성 33.0%), 2순위로 인적 네트워크(여성 27.3%, 남성 29.2%)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남녀 모두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 당직자에서 네트워크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8.0%p 더 높았으며(불만족 여성 28.9%, 남성 20.9%; 만족 여성 20.0%, 남성 32.7%), 그 이유에 대해 네트워크 활동이 정당 활동에 도움되지 않아서 34.6%, 여성들은 네트워크에 속해도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어서 23.1%, 자신의 네트워크가 핵심 네트워크가 아니어서 19.2%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본인이 속한 네트워크 내외에서의 소외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음.



- 정당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음’ 이 42.0%,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은 남성과 다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영할 것’이 21.6%로 나타나 여성 당직자 스스로도 성평등한 정당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과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여성 당직자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표 2> 여성 당직자의 정당 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직급별)

(단위: 명, %)

구분	여성 전체(88)	일반당직자(53)	중간당직자 이상(35)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음	42.0	41.5	42.9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은 남성과 다르다고 생각하나, 반영하기 어려움	18.2	24.5	8.6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은 남성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업무에 늘 반영하려고 노력	18.2	18.9	17.1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은 남성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영할 것임	21.6	15.1	31.4
계	100.0	100.0	100.0

3. 정당 내 여성 당직자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정당 내 여성 당직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 여성국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관점을 갖추기 위한 당원 및 당직자 대상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 정당 사무처 고위 당직 여성할당제 채택 및 여성 실·국장 40% 이상 보장
 - 고위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여성들의 참여가 적어도 40% 이상 보장되도록 해야 함.
- ▶ 여성정책 업무의 주변화 개선
 - 모든 정당의 설립 구성요건에 여성정책 전담조직을 당규와 조직구조에 명시하여 직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 여성업무를 남녀 당직자에게 모두 개방하고, 남성 당직자도 여성업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 당직자에게 여성업무뿐 아니라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업무는 여성만이 담당한다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 네트워크의 여성 당직자 참여 확대정책 제고
 - 여성 당직자의 경우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경험이나 고위직 간부를 멘토로 두는 사례도 드문 것으로 나타남. 여성 당직자의 경력개발을 공식적인 직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중간관리자 대상 여성 리더십 교육 강화

- 정당 내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직무에서의 경력개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여성 당직자의 경우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경험이나 고위직 간부를 멘토로 두는 사례도 드문 것으로 나타남. 여성 당직자의 경력개발을 공식적인 직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당원 교육 강화 등

-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세대 간, 성별 간 통합과 소통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 정당과,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관계부처: 국회입법조사처